

재활용·소각용, 수도권매립지로 '무차별 반입'

김명래·이현준 problema@kyeongin.com

2015년 08월 20일 목요일 제2면

작성 : 2015년 08월 19일 22:10:40 수요일

소각장 가야할 폐기물 많아
생활폐기물 93% 재활용가능
“매립 비용, 소각보다 저렴”
건설폐기물 비율도 줄여야

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매립지가 아닌 소각장으로 가야 할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반입 실태가 심각해 감시·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경기연구원은 19일 낸 '수도권 매립지 이슈와 시사점'에서 “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93.2%, 건설폐기물의 46.8%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”이라고 밝혔다.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중 종이, 플라스틱, 나무 등이 재활용·소각되지 않고 매립지에 묻힌다는 것이다.

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매립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'저렴한 매립비용'으로 분석했다. 폐기물 1t당 소각 비용은 10만~20만원, 재활용 처리 비용은 5만~10만원대인 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비용은 1t당 2만~6만원대로 저렴해, 재활용 등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
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.

지난 해 기준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폐기물의 반입 비율은 80.4%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.

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의 시민단체는 이날 불법 반입이 만연된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.

인천의 11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서구환경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 “수도권매립지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수집·운반 업체들의 불법 반입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”며 “특히 건설 등 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때까지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”고 말했다.